

“국가교통정책, 대중교통·녹색교통·교통약자 배려 정책 대폭 강화”

- ▷ 승용차 위주의 교통정책을 철도와 대중교통으로 전환
- ▷ 신도시를 보행·자전거 도로 모범도시로 개발 등 녹색교통 확대
- ▷ 장애인·고령자등 교통약자(전인구의 25.6%)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

- 이해찬 국무총리는 11.2(수) 정부중앙청사에서 「지속가능한 교통정책」을 주제로 제69회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하여 교통의 효율성, 환경성, 형평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체계 개선방안과 정책과제를 논의·확정하였다.
 - 이날 회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(위원장 고철환)의 주관으로 기획예산처장관, 국무조정실장, 행자부·환경부·건교부차관, 경찰청장, 중소기업청차장, 교통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다.
- 이번 회의에서는 그 동안 승용차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혼잡비용, 안전사고, 에너지 소비, 온실가스 배출 및 대기오염 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, 국가교통정책에 지속가능성을 통합하는 ‘지속가능한 교통정책(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Transport)’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.

- 상대적으로 수송효율이 높고 환경친화적인 철도와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, 보행자와 자전거 도로 등 녹색교통을 활성화하며,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또한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안전을 대폭적으로 강화하였다.

□ 이날 확정된 교통정책은 “인간과 환경이 함께하는 교통체계 구축”을 목표로 4개 분야의 핵심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다.

① 도로·철도간 시설투자 형평성 제고

- 교통시설 투자의 60% 이상을 도로에 투자하는 승용차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탈피하여 도로와 철도 등 수송수단간 상호 연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효율적 수송분담 구조를 만들기 위해 「국가기간교통망 계획('00~'19)」을 수정·보완
- 도로와 철도 건설시 현행 국고지원 비율이 고속도로 50%, 고속철도 35%로 차등 지원되고 있으나 수송수단간 종합평가체계를 통해 재원여건, 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고속철도 건설 국고지원 비율 상향조정 검토
- 철도·도로 복합 운송업체 지원제도 도입 검토 등 “복합물류 활성화 종합대책” 수립과 주요 항만, 산업단지 건설시 철도인입선 건설검토를 의무화 하는 등 철도화물 이용 촉진

< >
 · 30 ('71~'03) 4.2 , 2.4 가
 가
 · 가
 · 가 80% (' 02)
 · 가 1/30

② 대중교통 및 녹색교통 활성화

- 도시 특성에 맞는 교통시설보다는 경쟁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도시철도 위주의 건설 행태에서 도시형태, 교통수요 등 도시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중교통수단의 최적 선택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
- 행정중심복합도시, 혁신도시 등 신도시 건설시 대중교통활성화와 도시확산 억제를 위한 「대중교통중심 도시개발」 추진
- 영업용 차량외 일반차량도 차고지 증명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자동차 신규이전변경 등록시 차고지 확보를 의무화하고 주차장화된 지구도로의 보행·방재 기능회복을 위해 ‘대중교통전용지구’ 등 구도심 생활환경 개선 종합대책 수립

<	:	>
· 1	('07) :	()
· 2	('10) :	()
· 3	('11) :	

- 신규도로 건설시 도로의 특성에 따라 보행 및 자전거 도로 설치 여부를 검토하고 도시간 연결망 구축을 검토하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등 신도시를 보행자전거 도로 모범도시로 개발
- 폐도로(국도의 경우 총 420Km) 등 유휴 교통시설의 활용방안을 수립하며, '05부터 시행중인 저공해 차량 의무구입 대상(현 공공기관)과 적용지역(현 수도권)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도로·철도 등 교통시설 건설시 환경친화적 건설 지침 적용

③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

- 장애인, 고령자 등 교통수단 이용과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의 인구가 '03년에 전체인구의 25%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교통시설을 매우 취약한 실정임
- 교통약자 전용 특별교통수단 제공, 이동편의시설 설치 의무화, 저상버스의 단계적 도입확대 등을 포함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장기종합계획을 수립·추진

④ 교통안전 강화

- 그 동안 지속적으로 교통사고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사고율을 보이고 있고 교통선진국에 비해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낮음

('02) : 113, 125, 518

- 음주·과속·무면허 운전으로 중상·사망사고를 3회이상 일으킨 경우 일정기간 면허 취득을 불허하는 삼진아웃제 도입, 무인장비에 단속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합리화

- 권고사항으로 운영 중인 초·중·고 교통안전교육 의무화, 지자체 별로 교통안전교육장 설치, 전문지도교사 양성을 통하여 연령대별로 필요한 체험식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시행

'02 43% (2)

- 부족한 단속인원을 보완하기 위해 교통사고 다발 교차로와 외곽도로 위험구간을 선정하여 매년 단계적으로 교차로 다기능 장비 등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 등

□ 앞으로 관계부처에서는 '07년까지 이번에 결정된 정책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세부일정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.